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1	서문	004
2	국정과제 체계도	006
3	123대 국정과제 목록	007

국정
목표

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032	의료시·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013
-----	--------------------	-----

국정
목표

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② 내 삶을 돌보는 복지

0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016
0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019
0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022

③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0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025
0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028
0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031
0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034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0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037
090	튼튼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040
0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043

1. 서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폐허 같던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와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멈출 뻔했던 성장엔진이 힘차게 돌기 시작하고, 민생의 기반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대한국민의 강인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드높은 문화의 힘과 유연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언제나 위기 앞에서 뚝뚝 뭉쳐 큰 힘을 발휘해 오신 우리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에 나서주신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힘차게 대도약 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려면 대전환은 필수입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지금까지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대전환이 필수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생명을 희생하는 성장이 아니라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나아가갈 때 대한민국은 대도약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들이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들은 앞으로 변화하고 도약해 나갈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기준은 오직 하나, '국민의 삶'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초심을 되새기며 2년 차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정으로,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 국정과제 체계도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정
목표

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③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
목표

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① AI 3대 강국 도약
-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④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⑤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국정
목표

0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②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④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
목표

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②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③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⑤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⑥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⑦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⑧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
목표

0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②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③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3. 123대 국정과제 목록

국정목표 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①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정 0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국정 0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국정 0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국정 0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
국정 0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국정 0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국정 0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미통위
국정 0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전략 ②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국정 0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국정 0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국정 0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국정 0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전략 ③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 013	총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국정 0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국정 0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국정 0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국정 0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획처
국정 0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재경부
국정 0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국정목표 02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① :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0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국정 0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국정 0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국정 0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 0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
국정 0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전략 ②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국정 0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국정 0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 0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전략 ③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국정 0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국정 0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	산업부
국정 0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국정 0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국정 0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재경부
국정 0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국정 0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국정 0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국정 0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전략 ④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 0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기후부
국정 0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후부
국정 0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기후부·국조실
국정 0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국토부
국정 0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부
국정 0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기후부
국정 0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기후부
국정 0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기후부
전략 ⑤ :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국정 0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금융위
국정 0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국정 0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국정목표 03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①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 049	'5극 3특' 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국정 0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국정 0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국정 0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국정 0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획처
국정 0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국정 0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 0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국정 0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전략 ②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 0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국정 0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국정 0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재경부
국정 0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국정 0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국정 0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전략 ③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국정 0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국정 0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국정 0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국정 0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전략 ④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 0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국정 0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국정 0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국정 0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국정목표 04 |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①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 0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국정 073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국정 0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국정 0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노동부
국정 0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전략 ②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 0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국정 0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국정 0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국정 0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국정 0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행안부
국정 0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전략 ③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정 0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국정 0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국정 0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국정 0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전략 ④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 0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국정 0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성평등부
국정 0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국정 090	튼튼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국정 0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국정 0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동부

국정목표 04 |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⑤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 0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부
국정 0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부
국정 0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부
국정 0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노동부
전략 ⑥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국정 0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성평등부
국정 0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성평등부
전략 ⑦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 0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국정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국정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전략 ⑧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국정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국정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국정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국정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국정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미통위

국정목표 05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전략 ①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국정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국정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국정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국정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국정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전략 ②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국정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국정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국정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국정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국정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전략 ③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국정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국정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국정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국정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국정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성과

032

의료시·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2025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K-뷰티의 인기로 화장품 수출액 역시 약 114억달러로 최대치를 경신, 전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의료기기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외국인 환자도 201만명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과 발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을 실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인프라·R&D·산업육성 등에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향으로, 우선 유망분야 R&D를 확대하고 의과학자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료AI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뷰티·첨단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백신·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R&D 확대 및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 주요 R&D 중기사업계획(2026~2030)과 분야별 투자 확대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 과정부터 박사 후 연구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은 의과대학과 이공계대학원 협력 기반의 공동학위·연구 지원, 우수 의과학자 선정 등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하여 1,2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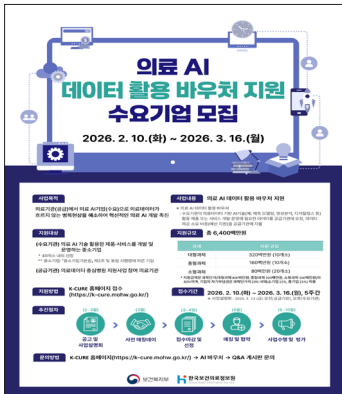
연구중심병원은 21개 병원(2025년) 확대를 통해 임상 기반 연구개발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혁신성과창출R&D 사업비 1,680억원(2024~2028)을 확보하였습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효약품’으로 품목 분류하여 임상시험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급을 변경 권고(2등급 → 3등급)해 임상 단계 진입을 앞당겼습니다.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패널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 총괄협의체를 개최(2026년 2월)하여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의 수집방안을 마련하고, 정밀의료와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분석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6개 대학 사업단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착수(2025년 4월)하여 현장 맞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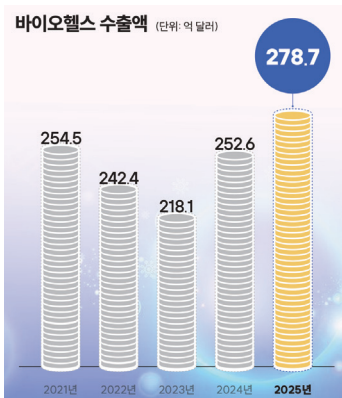
2026 의료 AI 바우처 사업 포스터



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중이며 2026년 4월 기준 16.5만명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병무청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데이터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를 제공하였으며,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고 디지털-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발의(2025년 11월)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수출액



바이오헬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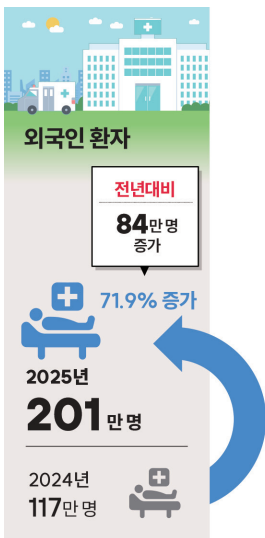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바이오 의약품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2025년 9월).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여 허가기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된 국내 개발 신약(뇌전증 치료제)이 허가(2025년11월) 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수출제조업 등록과 바이오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5,796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1~6호)하고 2개사 기업공개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수출 산업 8위에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하였고, K-뷰티의 인기로 화장품 수출액 역시 약 114억달러로 최대치를 경신, 전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의료기기도 해외기기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 60.4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외국인 환자도 201만명을 유치하여 2024년 117만명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및 필수약품 공급 안정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완성의 일환으로, 민간 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임상 1상 시험에 성공적으로 진입(2025년 12월)하였습니다.

필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2025년 11월)하여 국가필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민·관 공동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필수약품 정의에 '대체재가 없는 의약품'을 추가하여 국가 직접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2025년 9월) 해 필수약품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했으며, 「약사법」 개정(2025년 11월)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의약품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통보를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유망 분야 R&D 확대를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산업을 육성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 및 AI·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등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백신 효능평가 분석



**제2차 국가필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2025년 11월 26일)**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초로 2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월 최대 208만 원)까지 높였고, 26년 만에 의료급여의 부양비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 문턱은 현실에 맞게 낮췄습니다. 2026년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여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선정 기준의 문턱을 낮추고 급여 수준을 꾸준히 상향하며, 국민 결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가족 구조변화에 따른 부양비 악화, 1인 가구의 증가, 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불합리 제도 개선과 선제적 위험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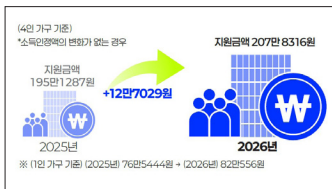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상, 합리적 기준 개선으로 생활안전망 강화

2025년 7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4인 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 80여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민의 복지 기준선을 높이고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월지원금이 2025년 대비 12만 7,029원 올라, 최초로 월 최대지급액이 200만원을 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6년 2월 기준 285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부터 유지되어 오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하였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제도를 폐지하여 5천명의 수급자가 추가로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모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사전협의는 2013년 61건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2,445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지역 복지사업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2025년 11월 개편하여 적기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은 정확하게, 신청은 쉽고 편리하게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찾아 손 내밀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2025년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137만 명을 찾아 상담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87.4만 명(64%)은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복지공무원을 도와 초기상담을 지원하는 AI 상담은 향상된 음성인식 정밀도와 데이터가 쌓여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약 137만 명 중 68만 명(49%)의 초기상담을 수행했습니다. 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해내던 초기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게 복지 욕구를 파악해내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전국 신속 확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위하여 2025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5월 18일 ‘그냥드림’ 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소의 사업장에서 운영되어 97,926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상담을 통해 1,533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300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확대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확대

업무와 관계없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본사업의 전국 시행에 앞서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에 2025년 1년간 1,959명을 지원하였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제도의 안정적 도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보건·노동·복지·법률 등 전문가, 노동자·사용자·의료인 등 관련자와 적용대상 및 지급액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형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전체회의
(2026년 4월 14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점검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 14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이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2025년 11월), 정부혁신박람회(2025년 12월) 등을 계기로 기본사회 정책과 우수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정책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0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2026년 3월 27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 기반(조직, 인력, 법령, 예산, 시스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로 의료·요양 등 복합적 돌봄수요가 증가하나,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으로 돌봄 체감도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요양 등 돌봄 욕구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노인 의료·요양 재정이 급증**하였으며, 국가돌봄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이상 차지(2024.12월, 행안부)

** 건보 노인진료비: (2020년) 37.5조→(2024년) 52.1조원, 장기요양 급여비: (2020) 8.9조→(2024) 14.8조원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과 불필요한 입원·입소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27일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였습니다.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25.9.30)



지역사회 통합돌봄 범정부 정책추진단 구성 및 지자체 책임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력·재정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예산·인력 및 시스템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시군구 전담조직·인력 배치 및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시범운영을 완료 하였습니다.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에 지역 서비스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하여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전년 71억원 대비 약 13배 증가), 지자체 전담인력 5,346명(기준인건비) 배정하고, 인건비 일부(2,400명, 1년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행안·국도·농림·문체부)·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복지부장관)를 구성하여, 통합돌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였습니다.(총 3회 논의, 2025년 9월 30일, 12월 22일, 2026년 3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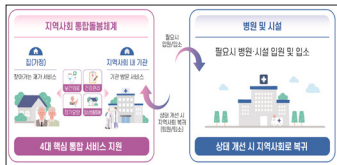
아울러, 본 사업 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발표(2026년 3월 5일)를 통해 제도의 비전·목표, 단계별 추진방향(도입기, 안정기, 고도 화기) 등 주요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및 장기요양, 돌봄, 의료, 주거 등 서비스 확충

복지부 1차관 경북 봉화군 현장방문
(’26.3.6)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지역 및 기관을 확대해 왔으며, 2026년 1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 의료기관 참여)

또한, 지자체와 병원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회복 및 일상생활 지원체계 필요에 따라 퇴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을 기획하여 약 1,200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에 맞춰 퇴원환자 연계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합돌봄체계로 연계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영양·가사·외출동행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4회)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재가센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의료·요양기관, 보건소 등 기능 확대 및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 서비스 기관 육성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기관과 협업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2026년 1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인프라 편차를 고려한 보건소 전담형, 협업형 모델 등 의료취약지 모형을 다각화하고 사업 공모를 추가 실시함으로써,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보건소 참여 시군구 70개, 지방의료원 참여 시군구 28개)

또한, 통합재가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308 개소에서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350개의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돌봄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로 주거와 돌봄 문제 해결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026년 1월) 하였습니다.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2026년 3월) 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 원년을 맞아, 제도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사회적 입원·입소는 줄이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의 제도적 보장,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 예산제, 장애인연금과 일자리 등 소득 지원 강화, 이동권 강화 등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법적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자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건강, 소득, 고용, 돌봄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를 대구와 경상북도에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과 대구에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각 1개소 추가 지정(총 14개소)하여 전문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발달지연 등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개입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아동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또는 자립 훈련이 필요한 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 사례관리 제공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에 필요한 정보제공, 권익 옹호, 동료상담, 위기지원 등 동료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동료지원센터 5개소(중일형 3곳, 주간형 2곳)를 신규 선정 및 통보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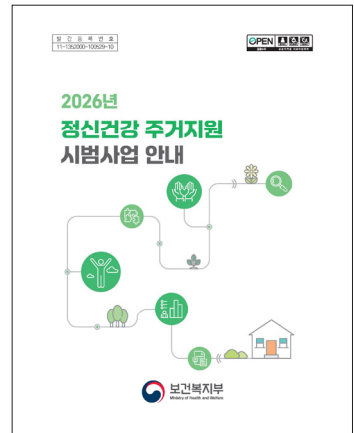
이재명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법안 간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2년 이상 계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쟁점 조율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입법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전국 시행(2027년 3월)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 하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을 2025년 4명에서 2026년 5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을 지정하였고,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전면 개편하여 배포(2026년 2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 중심의 거주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2026년 4월 15일)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건강권 보장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26년 2월),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또는 전문장애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방문재활 신규도입(안)을 장애인 건강주치의 협의체 구성·운영(2025년 9월)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2026년 5~10월)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바우처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개별 필요에 따른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33개 시군구 960명을 목표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12.7조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75개소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필수특화 분야 24시간 진료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한 상대가치 조정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환자기본법」 제정, 감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지속적인 위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65세 이상 가입자(전체 가입자 중 비중) : 2022년 875.1만명(17.0%) → 2023년 921.6만명(17.9%)
 → 2024년 970.9만명(18.9%) → 2025년 1,024.9만명(19.9%)
 * 보험급여비(전년 대비 증가율) : 2022년 83.1조 원(9.8% ↑) → 2023년 88.7조 원(6.8% ↑)
 → 2024년 95.2조 원(7.3% ↑) → 2025년 100.2조 원(5.2% ↑)

이에 이재명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를 합리화하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국고 지원 예산을 전년 교부금 대비 2,258억원 증액한 12.7조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인부담률 차등 기준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부담청구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활성화하고자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6년 1월 1일 시행)하였고,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가 제도 측면에서는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최종적으

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2026년 3월 26일)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 예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약가제도 개편안의 원만한 이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보장성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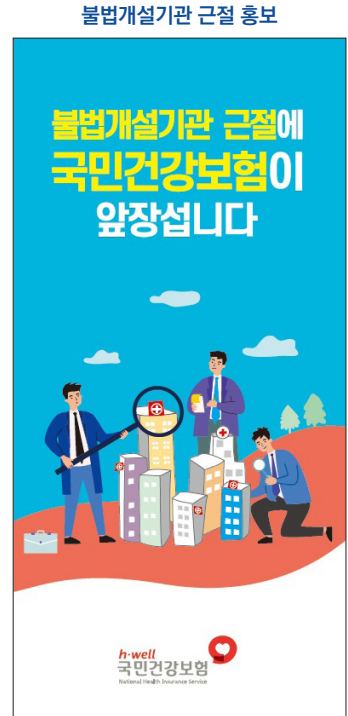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고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진료권 기반의 효율적인 의료 공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함에도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한 특정 분야에 대해 29개 종합병원·병원을 선정하여 24시간 진료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 175개소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중증·필수 진료, 응급 등 배후진료 역할 및 포괄 2차 병원과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마련(2026년 1월 29일)하는 등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 매년 신규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필수특화 분야에 급성 알코올 중독 분야를 추가하고 매년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하는 등 지역 내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아급성기 병원의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내실화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을 실현하기 위해 지불제도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보상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에 대한적 지불제도 추진, 상대가치 조정 등 방향성을 담아 발표(2026년 2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급여(舊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용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법 개정 절차 완료 후 2027년 1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하위법령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증증도에 맞는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5년 12월 11일)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과 환자의 권리·안전 보장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2025년 12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하여 의료 혁신 의제를(3개 분야·10개 의제) 선정(제3차 의료혁신위, 2026년 2월 26일)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운영(3월 말~)하여 의료혁신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환자 안전 분야에서는 CRE 감염증(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막 감염증) 감소를 위해 2025년 32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선별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90개소로 확대하고, 중소병원의 의료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기본인증제’ 기준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기본법」을 제정(2026년 4월 공포)하여 환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연말 목표로 의료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의료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CRE 감소전략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성 강화, 지속가능한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0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정부는 공공·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사 인력 양성규모(안)’을 발표(2026년 2월 10일)하고 「국립의원법」 및 「지역의사법」을 제정하였으며, 소아, 산모·신생아, 심뇌 등 응급의료 분야별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인구 및 의료자원의 대도시·수도권 집중, 불충분한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 공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여 필수의료 제공 인프라 부실과 함께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치료가능 사망률(2023년)) 서울 39.55명 vs 충북 49.94명(10만명당)
- (공공의료기관 비율(2023년)) 한국 5.2% vs OECD 평균 56.5%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 법제화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필수의료법」의 제정(2026년 3월 10일 공포)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필수医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필요한 곳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6년 5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등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의료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액배상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

세입(연 약 1.1조원)

- ①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 ② 수입 담배 관세(농특회계 분 제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7년 1월 1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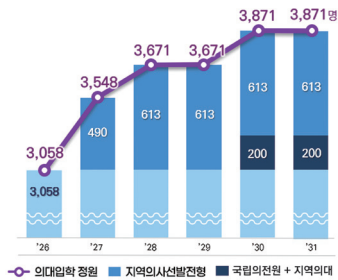


세출(법률상 용도)

- 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 ② 진료협력체계구축·운영
- ③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시설·인력·장비 확충
- ④ 취약지 지원
- ⑤ 지자체 지역필수의료 강화 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과학적 수급추계 + 민주적 논의를 통한 의대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2026년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심의·의결하여 2027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기존 의대의 신규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의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2025년 12월 「지역의사법」을 제정하고,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및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2026년 3월). 또한, 「국립의전원법」이 제정(2026년 5월)되어 공공의료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속 수련시간 상한 단축, 임신부 보호 강화 등 「전공의법」을 개정(2025년 12월 30일 공포)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지역의사 인력 확보
(지역의사법 제정)

2026년 1월

지역 필수의료 거점 육성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

2026년 3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2026년 4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마련
(공공의대법 제정)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국립대병원을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2026년 2월 19일)하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이 고난도·중증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인프라(2026년 812억원), AI전환(AI)(2026년 142억원) 및 연구 R&D(2025년~2027년 500억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2026년 790억원) 및 인프라 지원(2026년 1,418억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은 육성대책 및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과제를 담은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하여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2026년 3월~5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12개소 → 2026년 5월 14개소)와 야간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2025년 5월 115개소 → 2026년 5월 14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분만 기능 강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소를 지원(‘2025년 8월 10개소, 2026년 2월 5개소 지정)하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권역 1개소 및 지역 4개소, 2026년 2월)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증질환 중심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기존 인력·시설·장비만이 아닌, 진료기능까지 고려할 예정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현재 44개소에서 60여개소까지 확충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2025년 8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주관 제2차 합동외부평가가 결과 56개 지표 중 52개에서 최고 수준(5점)을 달성하여 우수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5점 비율) 2017년 1차평가가 61% → 2025년 2차평가 93%

또한,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을 300개(2025년)에서 800개(2026년)로 확대하고 2026년 2월부터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여 지역 단위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발표 및 「국립의원법」, 「지역의사법」 제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수행 및 분야별 인프라 확충, WHO 합동외부평가가 93% 영역에서 최고 수준 달성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으로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며, 응급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시범사업 브리핑
(2026년 2월 25일)



WHO 합동외부평가(JEE)
(2025년 8월 25일)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개편하여 금연 정책 등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빠짐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속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다각적 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주치의제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으로 환자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병상 확보와 자살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관리를 위한 충분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치의제 시행으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환자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26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하여 1차 332개소, 2차 2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층 수요를 고려하여 한의계 강점 질환 중심의 어르신 한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모형개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연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담배 정의 확대 및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시행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연초의 잎을 원료로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해 왔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등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담배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였고,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제품에 대해서도 가향물질 표시 제한, 담배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변화되는 규제 사항들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담배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2025년 11월부터 첫 시행하고,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운영체계 및 행정절차, 분석기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에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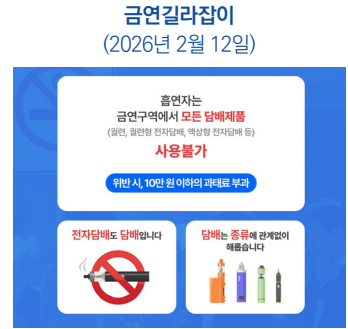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화상통신·전화를 이용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후 그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2020년 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 및 진료의 질 향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안정적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제도화 과정에 의료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를 해소하고 제도화 방안에 합의하여, 2010년 「의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 및 진료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한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진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배 정의 확대와 합성니코틴 규제 (2026년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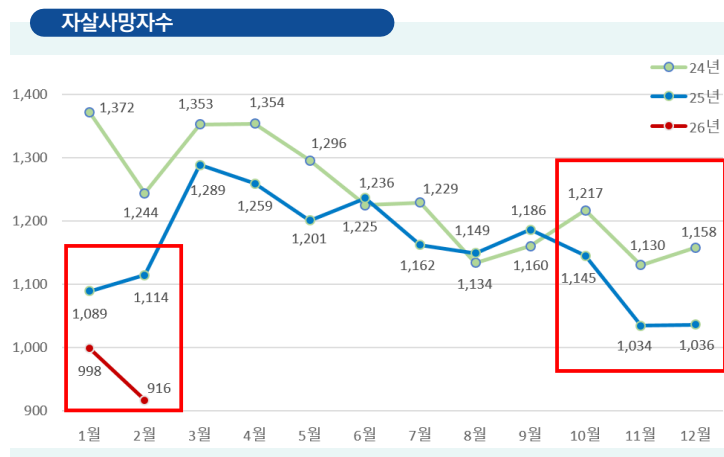


자살·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에 의료를 적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를 2025년 12월부터 시행하여 506개 집중치료실 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급성기 입원 환자 발생 규모인 3만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응급입원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2,000개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외(고립·은둔) 청년층 대상으로 자살예방상담 “마들렌” 어플리케이션 내 주기적 말벗형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5년 10월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140명으로 충원하여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소득조건을 폐지하여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심리검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살사망자(13,900명)는 2024년(14,872명) 대비 972명 감소하였으며,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연속 5개월 감소 추세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고 담배 및 정신건강 관리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국가 책임 간병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75개의 신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산정특례 혜택을 1,413개 질환으로 확대하고, 고가 희귀질환 의약품 신속 등재 시범사업과 당원병 환자를 위한 지원 품목 확대 등으로 희귀·난치 질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사적 간병비와 고가의 비급여 진료, 희귀·난치질환 등 의료 사각지대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본인부담 실태

간병인 : 환자	최소	평균	최대
1:04	월 43만원	월 90만원	월 137만원
1:06	월 26만원	월 64만원	월 101만원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간병비 급여화와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확대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정부는 간병 부담 경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청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2025년 9월 25일)하였습니다. 추진방향 공청회,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간병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5년 11월 4일)을 거쳐 장기근속장려금 및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요양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및 간병 표준교육 과정을 연구·개발하여 간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니트케어 3차 시범사업의 시설·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간병에 대한 국민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급여 정보포털 홍보자료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경감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비급여 적정관리 개선방안’이 발표(2025년 3월)됨에 따라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026년 2월 19일)하였습니다. 이후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통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도수치료 등 가격·급여기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전체 의료기관 대상의 비급여 보고항목 확대를 통해 비급여 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하였고,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방식을 개편(2026년 4월 30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급여 적정관리 및 가격공개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강화방안 브리핑 (2026년 1월 5일)



희귀 및 난치 질환 부담 완화 및 1형 당뇨병 등 국가책임 강화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가의 희귀질환 의약품이 신속하게 보험 급여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 대책을 발표(2026년 1월 5일, 복지부·식약처·질병청 합동)하고 70개의 신규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산정특례를 확대하고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2026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2025년 1,338개 → 2026년 1,413개(+75개))하고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확대(대상인원 2025년 810명 → 2026년 1,150명(+340명)) 시행(3월 말)하여 진단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로 희귀·필수 의약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국민의 적기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총 2,837개 제품을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공급하였고, 2025년 7월에 1형 당뇨 치료제인 글루카곤주사를 긴급도입하여 공급하고, 같은 해 12월에 약가 인정을 받아 환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제도화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고, 기 수립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비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생후 6개월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등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더욱 정교화할 방침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기존 13세까지 지원하였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청소년(14세)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임플란트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비 부담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및 일부 과잉의료비 부담을 축소하고, 간병부담의 경감, 비급여의료비 경감,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비 경감을 통해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에 나가겠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최대 13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책임지는 공격 입양체계로의 전면 개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 확대,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취약·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발표된 2025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 25.4만 명, 합계출산율(잠정)은 0.80명으로, 2023년 0.72명 이후 2년 연속 출산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반등은 긍정적이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난임부부와 임신부, 아동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취약·위기 아동과 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지원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아동은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은 1만원, 특별지역 아동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난임부부 및 임신부·영유아 지원

2026년 1월부터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난임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통지서 재발급에 따른 난임부부의 현장 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산후 우울증 또는 난임과 유·사산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간 5.8만 건 상당의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산·제주에 센터를 추가 선정(2025년 11개소 → 2026년 13개소)하여 지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 사업 지역을 기존 6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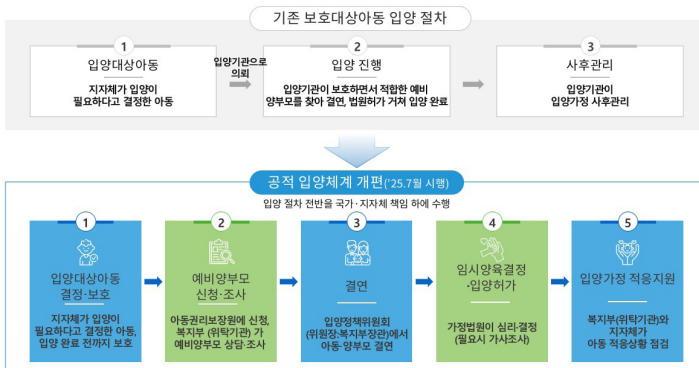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카드뉴스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5년 7월, 한국전쟁 이후 지난 약 70년간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입양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업무를 종료하였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양 절차 전반을 결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입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또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2013년) 이후 10년 만인 2025년 6월 비준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경남·전남 지역까지 넓히고, 사회복지·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양성하여 아동별 특성에 맞는 후견인 추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필

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이재명정부는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취약·위기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금액 및 횟수를 상향(30만원, 최대2회→50만원, 최대3회)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이 국가의 보호 아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며,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부부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양육 부담을 덜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위기 아동은 적기에 발굴·보호·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90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실질 노후소득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를 신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는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가입자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규모 역시 해를 거듭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짧은 제도 역사, 가입 사각지대, 불충분한 연금액,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안정성 약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現) 세대 청년 가입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7.6년(2025년 말 기준)입니다.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가입기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기에 군 복무·출산·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군 복무·출산으로 인한 가입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크레딧 인정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12개월·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12개월로 확대된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이 전체 복무기간으로 추가 확대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현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비교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비교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309만원)

구분	A값 초과소득월액	감액액	계정
1	100만원 미만	5만원 미만	감액 X
2	100만 ~ 200만원 미만	5만 ~ 15만원 미만	
3	200만 ~ 300만원 미만	15만 ~ 30만원 미만	감액 50%
4	300만 ~ 400만원 미만	30만 ~ 5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 A값(평균소득월액)은 전년 반영
· 감액액의 연평균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적용
· 감액 적용 기준은 지급대상 연금부터 5년간
· 2025년 기준 178만명 시행, 2025년 이후 유망한 근로자(신생아)만 적용

해외 주요 연금



2022년부터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감안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납부재개자에서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합니다.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장기 가입기반이 조성, 노후 소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기준 31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연금 수급권은 보험료를 납부해 ‘획득한 권리’로서 소득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 유인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319만원 이상 ~ 519만원 미만의 월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은 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기금규모는 1,458조원(세계 3위)에 달하며, 2025년 기금수익률은 18.82%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수익률 역시 8.0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투자 다변화,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 책임투자 원칙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 장기적 재정 안정을 달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구조개혁 논의 지원

보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초·퇴직·개인·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재 국회는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금특위 논의(2025년 4월·9월, 2026년 3월 전체회의 업무보고 실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18.82%, 기금규모 1,458조원으로 세계 3위의 기금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노후를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4차 전체회의
(2025년 9월 30일)



이재명정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5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1인 가구 급증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은퇴 세대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변화된 가족 구조에 맞춘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및 치매안심관리서비스 도입

이재명정부는 2025년 천만 노인인구 10.4%에 해당하는 11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2026년에는 수행기관 내 안전 전문인력 613명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20개의 신규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개시하였고,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생애역량과 경험을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2026년 2월에 마련하였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4월 도입하였습니다.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
(2026년 3월 27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 지원

어르신의 영양 관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식사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쇠 단계 전부터 예방이 가능하도록 노쇠예방 프로그램과 교육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로당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였으며, 향후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 100세 운동교실 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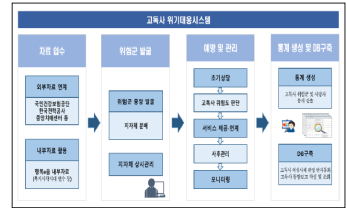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고독사 예방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독·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구축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026년 2월 27일 본격 개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기정보가 입수된 발굴대상자를 지자체에 연계함으로써 지역 간 위험자 기준·발굴 편차를 완화하고,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년·중장년·노인의 고립 양상 및 특성·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과 조기 발굴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2026년 2월 27일)



AI 로봇 등 은퇴세대 수요에 맞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 돌봄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AI,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 등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 9만대를 교체하기 위한 5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스마트 사회복지 시설 AX 스프린트(AI Transformation(AI 전환) sprint) 사업’을 추진해, 재가·시설에서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시니어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Age-Tech 종합지원센터’를 2026년 4월 17일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홈·시설 교류회
(2026년 1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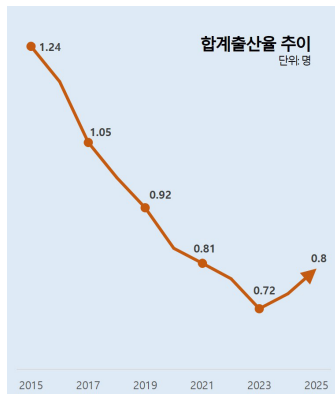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을 2025년 대비 3.5%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10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율(가이드라인 대비 종사자 인건비 지급 수준)을 2025년 96.4%에서 2026년 98.2%로 1.8%p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야간근로수

당 가산분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사업수행지역을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합계 출산율(잠정)
(2026년 2월 25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인구변화 적극 대응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하며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 추이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개편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은퇴 세대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